

데스크시각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뽕집 순례’에 나서는 ‘뽕덕후’는 아닌 지라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지만, 다른 도시에 가면 간혹 들르는 곳이 뽕집이다. 대전 성심당 소보로빵이나 군산 이성당 아채빵 등은 ‘아주 맛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먹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지역의 여러 음식을 맛보는 건 도시를 여행하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다.

타 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 이야기를 한다. 행여 그쪽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 많은 광주에 비하면 어떨지?’ DNA 중 하나다. 우리가 나서서 자랑하기 전에 이미 전국이 인정했다.

요즘 눈에 띄는 건 ‘주먹밥’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의 맛’엔 주먹밥 소개와 패키지 등이 전시돼 있고 KTX 승정역에는 주먹밥 가게도 들어섰다. 주먹밥은 광주시가 선정한

‘광주의 노래’와 ‘올해의 음식’

‘2019 올해의 음식’이다. 대표음식 선정 위원회가 추천한 한식, 오리탕, 주먹밥, 상주튀김, 육전, 무등산보리밥, 송정떡갈비 등 일곱 가지 중 선정됐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광주 주먹밥이 갖는 공동체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공유해 국민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음식으로 꼽힌 일곱 가지 중 굳이 ‘올해의 음식’ 한 가지를 선정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수 긴장게장이나 전주 비빔밥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은 어느 식당에 가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광주의 ‘주먹밥’은 맛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주먹밥을 사 먹는 외지인들이 여기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먹을까? 의문이다. ‘올해의 음식’을 매년 선정하는데 실속 없는 이벤트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여수 밤바다’를 만든다고?

그나마 ‘올해의 음식’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광주의 노래’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헛웃음부터 나왔다. 광주시는 시민을 하나로 결집하고 자긍심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중가요 형식의 노래를 만들기로 하고 작곡 의뢰 비용으로 우선 2000만 원을 편성했다.

김형석 작곡가가 제작을 맡고 가수 선정과 홍보 등을 위한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데 이 돈 또한 만만찮을 터다.

‘광주의 노래’ 추진은, ‘광주 시민의 노래’가 30년이 되었는데도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등 대중성이 없고 구시대적이라는 이용섭 광주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노래를 만들어 보급한다는 발상에 놀랐지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 같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뽕같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시는 ‘여수 밤바다’나 ‘부산 갈매기’처럼 노래를 통해 광주를 홍보한다는데 이 노래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리며 자연스레 홍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지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휘성의 ‘ACC송’을 비롯해 만들어졌다 사라진 캠페인이나 홍보 노래는 또 얼마마 많았던가.

지난 4월 문화마루에서 시작된 국악 시설 공연은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을 만든 데 나서 출발했다. 처음엔 매주 차례 공연을 진행했고 수영대회 기간 중에는 매일 무대가 열렸다. 당초 대회 후 주 1회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현재도 주 5회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의 문화 관련 예산이 풍성하다면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하지만 부족한 예산은 다양한 장르가 적절하게 나

눠 써야 하는 걸 감안하면 광주에서 무려 네 개의 국악 시설 공연이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과해 보인다.

‘광주다움’의 과잉 아닌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최근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세 가지 키워드는 모두 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다. 시정 목표인 ‘광주다움’이 오히려 광주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발목을 잡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다움은 우리 몸 속 싹틔듯처럼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 때 완성된다.

술지한 주먹밥 하나 먹으며 광주 정신이나 공동체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면 목이 막힐 것 같다. 5·18이 일어난 ‘광주 정신’은 우리가 새기고 일러야함에 분명 하지만 ‘당위성’에 지나치게 매몰된다면 ‘광주 정신’ ‘광주다움’에 피로감을 느낄 지도 모른다.

한데, 일단 많이 불려지려면 노래 제목에 ‘광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텐데 ‘제주도 푸른 밤’이나 ‘춘천 가는 기차’처럼 멋진 노래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이휘 실력과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식상한 몇 가지를 빼곤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 자주 떠오르는 한자 성어는 이거다. ‘과유불급’(過猶不及).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최영태 전남대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하여 첫 번째 개각을 했을 때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김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거나 그에게 남북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온 몇 사람이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런데 정작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뜻밖에도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이었다. 강인덕은 중앙정보부에 오랫동안 근무한 대북 전문가로서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놀라움과 함께 개혁 진영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왜 강인덕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했을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김 대통령 자신의 진보적 통일관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와 거부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일 정책을 원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사 방식과 ‘조국 대전’

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극론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보수층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강인덕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런 인사 스타일은 IMF 위기 극복의 일차적 책임을 떠맡은 재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에 자민련에서 추천한 이규성과 이원재를 임명할 때도 나타났다.

위 사례들은 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진영 논리를 배격하고 철저히 능력 중심과 통합 정신, 그리고 인사 시점의 국민 정서를 중시했음을 말해 준다. 물론 김 대통령의 이런 인사 스타일은 누구를 해당 장관으로 앉혀도 자신이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끌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위 두 가지 사례와 전혀 다른 인사도 있었다.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처 방식이 그랬다. 8·15 평양 축전에 참여한 강경우 동국대 교수가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문구를 썼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방북 허가를 내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

했고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임동원은 명실상부하게 햇볕 정책의 전도사였다. 그런 그를 야당이 해임하려고 요구했고 그 해임의 사유도 단지 방북 인사 한 사람의 돌출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임동원 한 개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김 대통령의 남북 화해 협력 정책 전체를 문제 삼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야당의 해임 건의안에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련이 가세했다. 김중필 전 총리는 임동원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에 찬성을 하겠다고 했다. 자민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DJP 공동 정부가 무너지고, 공동 정부가 무너지면 소수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임동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정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3년 8개월 동안 유지되었던 DJP 공동 정부가 무너졌다. 훗날 김중필은 “평소 신중한 자세를 가진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무슨 이유로 공동 정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임동원을 고집스럽게 보호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중필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평소 실용주의적이지만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 협력 정책 등 중요한 역사적 과제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거부한 김대중의 삶의 태도였다.

‘조국 대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 개혁 진영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 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언행 불일치를 보인 조국으로 인해 민주 개혁 진영이 중시한 공정 사회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는 내년 총선을 비롯하여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행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판자는 검찰일까, 아니면 내년 총선을 기다리는 유권자의 몫이 될까? 개인적 의견과는 별개로 일과와 경제 전쟁 등 큰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로 국민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고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대표·문학박사

2019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봉준호의 ‘기생충’. 나에게 이 영화는 감격 그 자체였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봉준호라는 인간에 대해 궁금해져 검색한 결과, 그가 근대 소설가 박태원의 외손자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아편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기생충’은 두 계급이 대립하는 구도로 그려진다. 자본주의의 수혜자인 박 사장(IT 기업 CEO)과 기우의 친구 민혁(연세대 공대생, 교환 학생으로 단기 유학)으로 형성화되는 부르주아. 그리고 1999년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텐딩에 의해 새로이 명명된 ‘프리캐리이트(Precariat-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있는 노동자 집단)’인

영화 ‘기생충’은 현재 진행형

기택 가족과 문광 가족. 봉준호는 후자인 프래리아이트를 인지해야 하는 일. 인식해야 하는 일을 통해 반자본론 또는 근대가 만든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생충’은 기득권의 ‘몰락’을 보여준 탈근대적인 스토리라는 것.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는 근대적 산물(자본주의, 근대, 중심, 개인)들의 위기 또는 종언(終焉)이라는 결말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왜 영화가 몰락을 말하는가? 그 첫 대상은 자본주의의 생산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몰락이다. 근대 가족, 즉 핵가족은 18세기 유럽 부르주아 중산층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근대 가족의 표본인 혈연(자연) 가족은 종교적 신념과 어우러져 ‘정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발명해냈다. 혈연 가족이라는 형태가 거부감 없이 세계적 차원에서 수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으리라.

먼저 박사장과 기우 친구 민혁. 두 남자는 ‘위생(근대 과학의 산물)’과, ‘기세(氣勢)’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위생의 차원에서 보자면, 박사장은 잘 정돈된 그야말로 깨끗한 공간을 선호하며 냄새로 선을 그어 계급을 나눈다.

민혁은 영화 초반 기우네 집에 들어섰을 때 발에 붙은 이물질에 신경 쓰고, 슈퍼 앞 테이블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쳐 확인하는 등 위생에 민감함을 보이며 짧지만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한다.

또 다른 공통점은 ‘기세’다. 박사장은 사업의 상승세에 힘입어 인지상정이라 여겨지는 미덕보다는 매사에 굽고 뺨을 이 확실한, 존재 자체가 기세다. 민혁 역시 노상 방노 남에게 기택이 모기 소리로 “씨지마세요, 씨발” 하는데 비해, 민혁은 “정신차라, 정신!”하고 흥성으로 소릴 지른다. 이에 기택은 “박력 있다!”로 충성을 “역시 대학생이라 기세가 다르다”고 반응한다. 그러나 남자들의 연대는 여기까지다. 영화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자들의 ‘몰락’이 시작된다.

자본의 상승자인 다송은 귀신(오군세)을 봤다는 이유로 트라우마 치료 중이다. 다송이 발작을 보이면 15분이라는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암시적이다. 다송은 인디언 놀이를 즐기며 중독 보존에 열중하지만, 기택과 충숙이 동일한 냄새를 풍긴다는 점을 폭로하며 미래의 박 사장을 예고한다. 그런 다송은 결국

생일잔치 날 귀신의 얼굴을 다시 보고 쓰러지지만, 박사장이 기택의 칼에 쓰러져 15분이라는 짧은 타임을 지키지 못한다.

다음으로 기택. 그는 위조 서류로 알바 면접을 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난 네가 자랑스럽다”라며 용기를 주지만, 정작 자신은 무계획, 즉 무위(無爲)의 삶을 선택해 생산성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택이 견딜 만했다. 그러나 영화의 중반부인 동일 계급인 오군세의 난투 장면에서 보인 코를 틀어막는 박 사장의 행동에, 그동안 그로부터 ‘냄새’의 차별을 받아오던 점을 상기하며 격분해 그를 단호히 처벌한다. 이로써 기택은 지하 세계로 ‘증발’하고, 박 사장과 오군세, 다송은 죽고 남은 남자는 기우뿐이다. 기우는 “대학, 취직, 결혼, 다 좋지만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돈을 벌면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한다. 과연 기우 ‘개인’이 피자 시대 알바를 열심히 ‘노오력’ 하면 저택을 살 만큼의 때돈을 벌 수 있을까?

그답을 구하는 과정은 ‘흙수저들의 외침’과 ‘비정규직들의 울부짖음’으로 ‘지금, 여기’에 현재 진행형이다.

社說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담 유입 완벽 차단율

세계 각국의 양돈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결국 국내에도 유입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남 지역 축산 농가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농장 관리인은 전날 오후 여섯 시께 폐사한 모돈 5두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죽은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어제 발생 농장 등의 돼지 3950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남도 역시 타 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일제 소독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가깝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명적이다. 감염

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한다. 잠복기는 3일에서 21일이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열병은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크게 번진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북한에서도 발병해 국내 유입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쏟았지만 끝내 국내 전파를 막지는 못했다. 전남의 돼지 사육 규모는 580 농가에 113만 5000마리로 전국의 10%를 차지해 도내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파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함께 완전한 차단과 방역이 필요하다. 돼지 열병의 확산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 하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행객들도 행여 해외에서 불법 축산 가공품을 들여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드론 테러에 무방비 원전과 산단이 위험하다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무인비행체를 뜻하는 ‘드론’은 비행할 때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drone)와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지난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원유 시설이 테러 단체의 ‘드론 공격’으로 불바다가 되었다. 손써 볼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우리 지역에는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와 여수 화력산단 등이 있다. 만에 하나 이들 국가보안시설이 ‘드론 테러’의 대상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군다나 이들 시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민간 생활 영역에 배치돼 있어 더욱 위험하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기’급으로 분류돼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 고도 3km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근래 국내 원전 인근에는 수시로 드론이 출몰하고 있다. 한빛원전 인근 상공에서도 최근 두 차례나 드론이 나타났다. 하

지만 올해 목격된 드론의 경우 조종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드론 방어 장비가 개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 방호 시스템과 기술력으로는 드론을 막아 내기는커녕 조종자와 조정 목적, 드론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빛원전과 마찬가지로 중요 국가보호시설로 지정된 여수 화력산업단지나 광양제철소도 드론에 대한 방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와 군은 5년 전부터 드론 테러를 방어하는 탐지 레이더를 정외대 등 핵심 방어시설에 도입하고 있다. 최근 드론과 각종 공격용 무기가 계속 소형화·점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안보시설에도 이에 대비한 방호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후에 걸쳐 극단적 ‘진영(陣營) 논리’가 정치권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을 ‘진영(陣營)’이라고 한다. ‘진영 논리’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진영의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고 배척하는 논리를 일컫는다.

진영 논리에 갇히면 의견 대립을 넘어 감정 대립, 서로를 무조건 배척하는 풍토가 자리하게 된다. 특히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이

이 특정 사안을 놓고 진영과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는 적이 되는 게 현실이다. 조국 장관 내정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른 ‘뻔 가르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르스러운 부분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정치 극단주의가 유행하면서 정치 성향이 극단화되고 있는 세계 정치의 추세이기도 하다. 유럽 정치권에서도 좌익 포퓰리즘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파와 좌파 혹은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중도주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들도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하지만 중도가 없으면 좌우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낼 존재가 없어지게 되며, 각종 갈등도 진영 논리에 휩싸여 격화될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

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38.5%로 최근 여론조사 중에선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는 조국 장관 문제로 불거진 극심한 진영 논리와 정치 극단주의에 진절머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모든 국민이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잘 듣고 대화를 통해서도 양보하거나 수용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와 여유를 찾을 때가 아닌가 싶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